

보도 일시	2022. 7. 6.(수) (배포 후 즉시)	배포 일시	2022. 7. 6.(수)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환경규제현장대응TF	책임자	과 장 최한창 (044-201-7581)
		담당자	사무관 나옥종 (044-201-7582)

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계가 함께 나선다

- 환경부 장관 대한상의 방문, 탄소중립 규제 애로사항 해소 약속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규제합리화 협력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최태원, 이하 대한상의)에 방문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한화진 장관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, 우태희 상근부회장,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(SK수펙스 SV위원장),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-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“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”라면서,
- “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”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.
- 이에 한화진 장관은 “전 세계의 경제·사회구조가 탄소중립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,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”라고 공감하며,

- “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(인센티브)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, 이 과정에서 환경부-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”라고 답했다.
-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대한상의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‘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’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.
-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,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.
- 또한, ‘탄소 포집 및 활용·저장 기술(CCUS)’과 관련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여 일부 건의는 이미 해소했으며,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.
- 한화진 장관은 “직통회선(핫라인)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”라고 제안하며, “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환경부 장관 대한상의회 방문 개요. 끝.

□ 행사개요

- **(목적)** 환경정책(탄소중립·순환경제) 목표달성과 어긋나는 환경규제 신속 발굴·합리화를 위해 핫라인 운영,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혁신 협력체계 강화
- **(일시)** '22. 7. 6(수) 14:00~14:30
- **(장소)**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접견실(중구 세종대로 39)
- **(참석자)** 대한상의 회장, 상근부회장, 서울상의 부회장(SK수펙스 SV위원장), 지속가능경영원장
 - * 환경부 : 장관, 정책기획관, 기후전략과장, 환경규제현장대응TF 팀장

□ 논의개요

- **(환경부)**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신속트랙 가동, 상시 소통 및 대안 모색 등 환경규제 혁신에 협력 당부
- **(상공회의소)** 탄소중립 관련 규제 개선, 탄소중립 투자확대 기업들 위한 인센티브 확대